

방재관계법규

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재난관리정보’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, 동원가능 자원정보, 시설물정보, 지리정보를 말한다.
- ② ‘재난관리’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③ ‘안전취약계층’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- ④ ‘재난안전데이터’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.

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
- ②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·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- ③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·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- ④ 도로·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

3.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의 내용으로 (가), (나)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(가)은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(나)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(가)

(나)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
| ① 기상청장 | 해양수산부장관 |
| ② 기상청장 | 행정안전부장관 |
| ③ 행정안전부장관 | 해양수산부장관 |
| ④ 행정안전부장관 | 기상청장 |

4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.
- ③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 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(가)에 들어갈 말은?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(이하 ‘대규모재난’이라 한다)의 대응·복구(이하 ‘수습’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(가)을(를) 둔다.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재난안전상황실 |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|
| ③ 중앙사고수습본부 |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|

6.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② 인증대행기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,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,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·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7.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·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·관리주체별 복구 내용,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9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권자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 수립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— 시장·군수·구청장
- ② 시·도지사 — 시장·군수·구청장
- ③ 행정안전부장관 — 시·도지사
- ④ 시·도지사 — 시·도지사

10.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·고시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③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1.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을 작성하는 경우, 단계별 행동 요령 중 예방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
- ②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·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방재물자·동원장비의 확보·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·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·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1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.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E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1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.
- ②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.
- ④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1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.
- ②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,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
-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,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
- ④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15. 「행정심판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.
-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·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.

16.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

17.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,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.
- ②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.
-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,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-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.

18. 「국가배상법」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‘공무원의 직무’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소정의 ‘공무원’은 「국가공무원법」이나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.
- ③ 생명·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·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.
- ④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.

19.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.
- ②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.
- ③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,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.

20. 「행정소송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처분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.
- ② 당사자소송은 국가·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.
- ③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- ④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.

21. 「행정기본법」상 법률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.
- ㄴ.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률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ㄷ.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
22. 「행정조사기본법」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장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.
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23.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.
-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.
- ③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.
-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24.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상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구 「건축법」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.
-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.

25.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.
-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.
- ④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,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.